

최근 노동시장 동향 및 과제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여건과 고용실태, 고용창출/유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경기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등에 따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당분간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국민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성장률은 3.6%로서 2010년의 6.2%에 비하여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게다가 2012년에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와 금융불안·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고용은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감소(-0.3%)에 대비한 반사효과, 경기변동에 다소 후행하는 고용의 변화로 2010년에 비하여 415천 명(1.7%)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고용은 금융위기 직후 3년간 높아졌던 고용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이외에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노동수요의 위축, 부가효과를 상회하는 실망효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 등으로 2011년에 비하여 260천 명(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간 고용창출규모가 100만 개를 약간 상회할 뿐임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2011년 명목임금수준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져, 실질임금이

〈표 1〉 최근 노동시장 주요 지표 동향

(단위 : %, 천 명)

	2008	2009	2010	2011
GDP 증가율	2.3	0.3	6.2	3.6
생산인구(증가율)	39,597(1.1)	40,092(1.2)	40,590(1.2)	41,052(1.1)
취업자(증가율)	23,577(0.6)	23,506(-0.3)	23,829(1.4)	24,244(1.7)
고용률	59.5	58.6	58.7	59.1
고용탄력성	0.268	-0.952	0.223	0.483
명목임금 증가율	4.4	2.2	6.4	-0.7
물가 증가율	4.7	2.8	3.0	4.0
실질임금 증가율	-0.2	-0.5	3.4	-4.5

주: 2011년 명목/실질임금 증가율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1~11월 기준.

2008~2009년에 이어 또다시 낮아졌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예산을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예산’으로 편성하여, 일자리대책 부문의 예산을 2011년보다 6.8% 증액하였다. 특히 일자리예산은 저소득층,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직접일자리 확대, 청년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규모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정책과 더불어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사회안전망 누락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비정규직 대책(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정책(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물론 높은 경제성장률이 일자리의 창출/유지에 기여하지만, 이전만큼 고용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항상 초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향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고용의 질적 개선을 고려하는 미시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KLI**